

관세법개론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월별 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②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달한다.
- ③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 ⑤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관세 부과와 제척기간 및 관세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관세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 ②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다.
- ④ 납세자의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 ⑤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3. 합리적기준에 의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일지라도 국제시장에서의 거래가격으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을 때는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②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다.
- ③ 동종·동질물품의 수출국 국내판매가격은 과세가격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 ④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선적일, 시장조건 등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할 수 있다.
- ⑤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더라도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배제하고 합리적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우선 적용할 수는 없다.

4.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액정정의 경우에는 관세의 납부기한은 정정신청한 날의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 ② 세액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에 따라서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가산세 징수의 대상이 된다.
- 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5. 관세법 상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이하 “위약물품”이라 한다)등의 관세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위약물품 관세환급시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최초 수입 신고된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여야만 그 관세를 환급한다.
- ②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 후 계속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 ③ 위약물품의 관세환급시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경우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여야만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 ④ 위약물품의 관세환급시 당초 계약 내용과 상이하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 ⑤ 위약물품의 관세환급시 관세분할납부기간이 종료하지 아니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당해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6.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며칠의 범위 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가?

- | | |
|-------|-------|
| ① 7일 | ② 10일 |
| ③ 15일 | ④ 20일 |
| ⑤ 30일 | |

7. 관세법 상 납세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 ① 소급과세의 금지
- ② 중복조사의 금지
- ③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 ④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⑤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8. 관세법 제156조(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 ③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수수료로 1만8천원을 납부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동일한 선박으로 수입된 동일한 화주의 화물을 동일한 장소에 반입한 때에는 1건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신청으로 보아 허가 수수료를 징수한다.
- ④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 ·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9. 관세법 제191조(보세건설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운영인은 보세 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사용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사용 전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②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을 적용한다.
- ③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과세환율 적용시점은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이다.
- ④ 운영인은 사용 전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10. 관세법상 수출입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관세법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물품은 이를 압수 할 수 있다.
- ③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으로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에 의한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1.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는 자로 볼 수 없는 사업자는?

- ① 보세운송업자
- ②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물품의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 ③ 외국무역선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④ 외국무역선으로부터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⑤ 개항 안에 있는 보세창고에서 용역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12. 관세법상 수입신고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수입신고 물품은 원칙적으로 신고 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로부터 신고 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경미하고 신고수리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수리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④ 수입신고 물품이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반출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하할 수 있다.
- ⑤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된 때에는 수입신고를 각하 할 수 있다.

13. 관세법상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자는?

- ① 보세운송주선을 업으로 하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②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 ③ 전자문서중계사업자
- ④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 ⑤ 도선사업을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14. 甲이 전산장비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과세가격은?

• 거래가격 : FOB US\$ 100,000	• 해상운임 : US\$ 30,000
• 수입항보세구역창고료 : US\$ 10,000	• 보험료 : 비부보(단,CIF에서와 같이 최소
• 제3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 US\$ 1,000	담보조건 부보시 US\$ 500)

- ① US\$ 141,500 ② US\$ 140,000
 ③ US\$ 131,500 ④ US\$ 131,000
 ⑤ US\$ 130,000

15. 관세범조사에서 발견한 범죄혐의가 있는 물품의 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압수물품은 편의에 의해 해당 물품의 소지자에게도 보관시킬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이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제시요구에 응하였으나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압수처분을 받을 자는 그 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일몰부터 일출까지는 압수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압수를 개시하였거나 현행범인 경우는 야간일지라도 압수할 수 있다.

16. 관세법을 위반한 다음 행위자에 대해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 ① 관세를 포탈한 물품을 시가가 얼마인지 감정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자
 ② 풍속을 해치는 서적을 수입한 자
 ③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④ 수입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보세구역에서 신고된 물품을 반출한 자
 ⑤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7. 다음 관세법상 통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화폐·채권·기타 유가증권은 수출입 금지물품이다.
- ② 관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에 국한된다.
- ③ 세관장은 수입물품이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관 보류하여야 한다.
- ④ 관세청장은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수입신고수리 된 물품으로서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은 물품은 신고 수리기간 경과여부를 불문하고 보세구역반입명령 대상이다.

18.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제출 생략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 ② 우편물(관세법 제25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③ 개인에게 유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 ④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 ⑤ 기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19.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원산지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완전생산기준에 따르면 당해국의 선박에 의해 포획된 어획물은 그 포획지역을 불문하고 당해국을 원산지로 본다.
- ② 당해 국가에서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는 당해 상품의 제조·가공국을 원산지로 본다.
- ③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없다.
- ④ 관세율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을 때는 가격 비중이 높은 쪽 물품의 원산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 ⑤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의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20.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폐기된 때에는 그 운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 ② 세관장의 폐기승인을 얻은 외국물품 중 폐기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③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해체 및 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 ④ 외국물품과 외국무역선으로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 ⑤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을 위하여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21. 외국무역선으로부터 외국물품의 하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항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물품을 하역할 수 있다.
- ② 외국물품은 외국무역선에 적재하여야 하며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내항선에는 적재할 수 없다.
- ③ 외국무역선이 개항 밖에서 물품을 하역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선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인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그 외국물품 그대로 외국무역선에 적재할 수 있다.
- ⑤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놓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 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이다.
- ②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 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이다.
- ③ 관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이다. 다만,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 ④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이다. 다만, 감면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 ⑤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이다. 다만, 과세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23. 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제2항 제1호의 시설기계류·기초 설비품·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장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분할 납부의 요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 납부를 승인 할 수 있다.
- ②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 할 것
- ③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 할 것
- ④ 당해 관세액이 3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 ⑤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내지 제72조(계절관세)의 규정을 적용 받는 물품이 아닐 것

① 재수출면세제도 ② 재수입면세제도
③ 손상감세제도 ④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제도
⑤ 재수출감면세제도

- ①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 승인을 얻어 수입신고 하는 우편물의 경우
- ②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 ③ 보세구역(관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 ④ 납세 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⑤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 ① 국채 또는 지방채
- ② 토지
- ③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유가증권
- ④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항공기
- ⑤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27.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 및 징수하는 내국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법인세 ② 부가가치세
③ 주세 ④ 교육세
⑤ 농어촌특별세

28. 인천상사는 실화주로 동해물산에게 수입을 위탁하였다.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는 동해물산이 화주로 표시되어 있다. 동해물산이 반입한 외국물품이 인천세관의 지정장치장에 장치도중 도난되었다면 이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 ① 인천상사 ② 동해물산
③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④ 절취한 자
⑤ 도난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없음

29.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거래 관행상 거래가 성립 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원유·곡물·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 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 ④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 ⑤ 세관장은 확정가격신고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 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① 증가산금 ② 가산세
③ 납부세액 ④ 과태료
⑤ 과징금

- ①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② 합의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관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정국가와 관세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 ④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는 국제협력관세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⑤ 수입물품의 화주 또는 신고인과 보세창고 운영인 사이에 납세의무에 대하여 경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인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 ① 세관장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와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 ④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친다.
- ⑤ 심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3. 관세법에 의한 관세감면이 가능한 물품이 아닌 것은?

- ① 사료 작물재배용 귀리 종자
- ② 관세청이 수입하는 통관검색용 X-Ray 장비
- ③ 주한 독일영사관이 수입하는 업무용 컴퓨터
- ④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수입하는 촬영된 필름
- ⑤ 외국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34. 다음 중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 ① 외국무역선의 출항
- ② 부패·손상으로 인한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폐기
- ③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
- ④ 보세창고의 설치 운영
- ⑤ 검역을 요하는 물품의 보세운송

35.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이므로 수입물품의 보세운송 절차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 ② 보세운송 신고는 보세운송주선업자 명의로 할 수 있다.
- ③ 세관관서에서 통관역까지 외국물품 상태로 보세운송 할 수 있다.
- ④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연장 할 수 없다.
- ⑤ 보세운송 하는 외국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는 경우 관세를 징수한다.

36. 세관장이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 시킬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②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 ③ 1년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 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 ④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이 설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⑤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37. 수출입 및 반송 신고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는 수입신고가 생략된다.
- ② 수입신고가 생략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하는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된 물품은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 ③ 반송 신고는 당해 물품이 관세법 규정에 의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④ 입항 전 수입신고물품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입항 후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 ⑤ 입항전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생략 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입항전에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38. 관세법상 우편물 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서신을 포함한 모든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 ② 통관우체국은 우체국 중 체신관서장이 지정한다.
- ③ 판매목적으로 반입되는 우편물은 일반 수입물품의 신고절차에 따라 정식 수입 신고 하여야 한다.
- ④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할 우편물을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 ⑤ 우편물의 과세물건은 통관우체국에서 세관검사를 하는 때에 확정된다.

39.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②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③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와 장기간 무역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 ④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⑤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40.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문서를 변환·처리·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고 당해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질 것
-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 또는 통신 분야의 기술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일 것
- ③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중계방식과 관련한 기술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인 이상일 것
- ④ 전자문서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1인 이상일 것
- ⑤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일 것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41. 대외무역법령상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유통 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를 검사하는 권한
- ② 원산지표시대상품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통관될 때 원산지 표시의 확인에 관한 권한
- ③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한 물품등과 관련 서류의 검사에 관한 권한
- ④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명령에 관한 권한
- ⑤ 물품등의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에 관한 권한

42. 다음 중 대외무역법령상 무역거래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수출을 하는 자
- ② 수입을 하는 자
- ③ 수출자에게 수출을 위임하는 제조업자
- ④ 외국의 수출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자
- ⑤ 물품을 생산하는 자

43. 다음 수출 또는 수입의 정의 중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의 물품을 인도 또는 인수하는 거래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거래가 아닌 것은?

- ①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입
- ② 위탁판매수출
- ③ 외국인도수출
- ④ 외국인수수입
- ⑤ 무환수출입

44. 수출입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출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의 물가 안정, 수급 조정, 물품 등의 인도 조건, 그 밖의 거래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수출승인 사항 중 원산지, 도착항, 규격 등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당초 승인 기관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하나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각각의 승인은 상호 독립적으로 받아야 한다.
- ④ 수출·수입승인 사항의 변경은 수출·수입승인의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의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에 수입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변경승인·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수출입승인 사항의 변경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승인 사항에 관하여 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45. 다음 중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신고가격기준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초과 물품의 임대수출에 해당하는 무역거래를 위한 무환수출
- ② 신고가격기준 미화 10만 달러 상당액 초과 물품의 임대수입에 해당하는 무역거래를 위한 무환수입
- ③ 신고가격기준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초과 물품의 연계무역에 해당하는 무역거래를 위한 무환수출
- ④ 신고가격기준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초과 물품의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는 무역거래를 위한 무환수출
- ⑤ 신고가격기준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초과 물품 중 수출승인면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무환수출

46. 다음 중 대외무역법령상 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외화획득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거래는?

- ①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 ② 외화를 받고 외항항공기에 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 ③ 절충교역거래의 보완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등을 국내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 ④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 ⑤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47. 다음 중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건조 또는 단순 가열
- ② 냉동, 냉장
- ③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 ④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 ⑤ 돼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육한 후 도축한 돼지고기

48. 지식경제부장관이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물품등의 수출의 공정한 경쟁을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대외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역거래자에게 수출하는 물품등의 가격, 수량 등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물품등을 수출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출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다른 무역거래자를 제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다른 무역거래자의 상대방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③ 기술, 영업정보의 부당사용 : 다른 무역거래자의 기술 또는 영업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무역거래자의 해외에서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④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⑤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다른 무역거래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무역거래자의 해외에서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49. 대외무역법령상 산업피해구제수단으로서 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대상 물품, 수량, 적용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제한수량은 최근의 대표적인 3년간의 수입량을 연평균수입량으로 환산한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과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전부 합산한 기간이 8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⑤ 수입수량제한조치는 조치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만 적용한다.

50. 다음 중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무역위원회
- ②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③ 국가전자무역위원회
- ④ 관세심의위원회
- ⑤ 전략물자관리원

51. 대외무역법령상 외화획득용 원료등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포장재를 포함)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② 외화가득율이 40%인 군납용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③ 부가가치세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외국환은행의 장은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가공·유통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2차에 한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⑤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한 자가 외화획득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

① 바세나르체제(WA) ② 핵공급국그룹(NSG)
③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④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⑤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설비수출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산업설비수출의 승인기관은 연불금융지원거래인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된다.
- ④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이란 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로서 산업설비수출에 포함된다.
- ⑤ 한국기계산업진흥회만 산업설비수출촉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 ①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 ②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 ③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 ④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 ⑤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① 개인에게 유상 송부된 탁송품
- ②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③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④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 ⑤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56. 다음 중 수출·수입실적의 인정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
- ②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다만,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
- ③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경비사용분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 ④ 수출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지는 것으로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
- ⑤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지급액

57. 다음 중 거주자가 비거주자(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대한 대외무역법령상 용역의 제공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에 해당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비거주자의 상업적 국내주재에 의한 제공
- ②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 ③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 ④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주재에 의한 제공
- ⑤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

58. 다음은 전략물자에 관한 설명이다.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가.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 이내에 수출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나. 전략물자 판정의 유효기간은 ()으로 한다.

다. 물품등의 제조자나 무역거래자는 사전에 그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서류를 ()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① 가: 10일 나: 1년 다: 5년 ② 가: 15일 나: 1년 다: 5년
- ③ 가: 15일 나: 2년 다: 5년 ④ 가: 10일 나: 2년 다: 3년
- ⑤ 가: 10일 나: 1년 다: 3년

59.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 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 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의 수입 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단, 천일염 제외)
- ②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단, 천일염 제외)
- ④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한국산”, “韓國產”, “Made in KOREA”, 또는 제조원을 한국내 주소와 회사명 또는 상호 등으로 명기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⑤ 천일염의 경우에는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60. 다음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
- ②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당초의 목적 외의 용도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사용한 자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자
- ④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와 수입을 위탁한 자로서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지 아니한 자
- ⑤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그 업체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한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직원

61. 거주자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를 하고자 할 때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국내 출자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 ②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특정보험사업자가 외국의 보험사업자와의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재보험료, 재보험금, 대행중개수수료, 대행업무비용, 공탁금 및 공탁금 이자 등을 지급 또는 영수함에 있어서 그 대차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
- ③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로부터 영수할 금액과 당해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에게 지급할 금액(거주자의 신용카드 대외지급 대금, 사용수수료 및 회비)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
- ④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및 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 ⑤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62.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때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 ①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비거주자인 조광권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② 비거주자가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③ 국민인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④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한다)된 자금으로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① 약속어음·환어음·신용장을 수입하는 경우
- ② 비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출하는 경우
- ③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내 또는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 ④ 수출물품에 포함 또는 가공되어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 ⑤ 비거주자가 입국시 휴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① 50억원 이상일 것 ② 40억원 이상일 것
③ 30억원 이상일 것 ④ 20억원 이상일 것
⑤ 10억원 이상일 것

- ① “해외여행자”라 함은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일반해외여행자로 구분한다.
- ②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국내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는 “해외체재자”에 해당한다.
- ③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로서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은 “해외유학생”에 해당한다.
- ④ 국내기업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근무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국내거주기간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는 “해외체재자”에 해당한다.
- ⑤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로서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은 “해외유학생”에 해당한다.

66. 다음 중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외이주예정자(영주권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해외이주비”에 해당한다.
- ②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등”이라 함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추심 또는 영수를 하거나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계정간의 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물품”이라 함은 지급수단, 귀금속 및 증권 기타 채무를 표시하는 서류 이외의 동산을 말한다.
- ④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재외동포”에 해당한다.
- ⑤ 액면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는 “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는다.

67.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 신고를 요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② 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투자를 위해 해외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 ④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
- 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68.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사무소의 경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외사무소의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는 그 항공 또는 선박회사의 해외지점의 주재원급여·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그 항공 또는 선박회사의 전 해외지점의 당해 연도 수입금의 100분의 30범위를 초과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 ③ 해외사무소의 확장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설치비의 정산 결과 미사용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해외사무소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개산 지급을 할 수 있다.

69. 외국환거래규정에서 비금융기관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할 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유로 정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자가 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 ②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가 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 ③ 정부투자기관이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④ 금융감독원이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⑤ 수입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법인이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70. 외국환거래법령에서 거주자는?

- ①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
- ②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
- ③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
- ④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
- ⑤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로서 일시귀국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3월이상 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

71.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상호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상호계산신고서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폐쇄된 상호계산계정의 대차기잔액은 매 결산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해당 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에 지급 또는 영수해야 한다.
- ③ 상호계산계정을 통해 대기 또는 차기할 수 없는 항목은 상호계산상대방과의 채권 또는 채무로 한다.
- ④ 상호계산계정의 기장은 당해 거래가 물품의 수출입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입의 완료 후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 ⑤ 상호계산계정의 결산은 회계기간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결산주기를 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72.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외환시장 안정협회의 위원장이 그 협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자는?

- ①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직원 ② 한국수출입은행의 소속 직원
- ③ 관세청의 소속 직원 ④ 국제금융센터의 소속 직원
- ⑤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

73. 외국환거래규정 중에서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 제출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를 위하여 미화 3천만불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비거주자와 행하는 해외예금, 금전대차, 담보제공거래 및 외국환은행에 대한 담보제공
- ② 외국환은행의 증권투자전용대외계정 현황
- ③ 증권회사의 일반투자자의 매분기별 외화증권의 투자현황, 매매실적 등
- ④ 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 ⑤ 거주자(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제외)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경우

74.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거주자의 금전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대한 다음 거래 중 신고를 요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한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② 국제유가증권결제기구에 가입한 거주자가 유가증권거래의 결제와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일중대출(intra-day credit)을 받는 경우
- ③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거주자 회원은행이 CLS은행으로부터 CLS은행이 정한 일정 한도의 원화 영수포지션(Long Position)을 받는 경우
- ④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거주자 회원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일일 원화신용공여(Over-night Credit)를 하는 경우
- ⑤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 회원은행으로부터 일일 원화신용공여(Over-night Credit)를 받는 경우

75.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 ① 특정 외화부채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화부채의 범위, 지급준비금의 대상통화·적립시기 및 최저한도를 정할 것
- ② 외국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의 매입 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구분 및 한도, 그 산정기준이 되는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산정방법, 시기 및 기간을 정할 것
- ③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운용항목과 항목별 조달·운용방법을 정할 것
- ④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비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만기별 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과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및 기준을 정할 것
- ⑤ 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용하는 계정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대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범위, 자금의 조달·운용방법과 처리방법의 기준을 정할 것

76. 외국환거래자료의 중계·집중·교환·분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외환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의 유출 및 훼손 방지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근 또는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파괴 기타 위험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외환거래정보의 신속한 집중과 집중된 자료의 사실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한국은행총재는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77.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환의 매매
- ② 한국은행, 외국정부 또는 외국중앙은행에의 예치·예탁 또는 대여
-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급하기 전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영속적으로 행하는 지급
- ④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예탁 또는 대여
- ⑤ 한국은행·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거래에 따른 채무의 보증

78. 외국환거래법령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을 정지 또는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자산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②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③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의 수리를 요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④ 지급증빙서류·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⑤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79.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외국은행국내지점의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납입자본금·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
- ② 감기금·을기금·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
- ③ 납입자본금·감기금·을기금·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
- ④ 납입자본금·을기금·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
- ⑤ 납입자본금·감기금·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

80. 외국환거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 또는 행위는?

- ①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서의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 ② 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외화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 ③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 ④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귀금속 구입
- ⑤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행정법개론

1. 행정청의 권한의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권한의 대리에 있어 임의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한하는데 반해, 법정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 미친다.
- ②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은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반해, 권한을 대리하는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 ③ 권한의 위임과 권한의 내부위임은 모두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는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
- ④ 권한을 임의대리하게 한 피대리관청은 대리관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나, 권한을 위임한 위임기관은 법률상 권한이 이전된 것이므로 수임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
- ⑤ 권한의 위임과 권한의 대리는 모두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민감사청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감사기관에 한다.
- ②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불복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관계는 언제나 공법적으로 구성된다.
- ④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주민투표권이 있다.
- ⑤ 우리나라는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주민소환투표 청구기간의 제한규정이 없다.

3.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적법성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소송이다.
- ② 주민 1인에 의한 제소도 가능하다.
- ③ 피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 ④ 관할 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다.
- ⑤ 주민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4. 행정법상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관은 본체인 행정행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해서는 아니된다.
- ② 부관은 재량행위보다 기속행위에 더욱 적합하다.
- ③ 관례에 의하면 부담이 아닌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은 부인된다.
- ④ 강학상의 인가의 경우에도 관례상 부관의 부가가 문제되지 않는다.
- ⑤ 사정변경으로 인한 부관의 사후변경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5.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자신의 감독·지배권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 ③ 범인은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④ 행위책임은 인적 성질의 책임이므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 ⑤ 경찰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여 제3자에게 특별한 희생을 발생시킨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내용과 다른 것은?

- ① 공공기관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 ③ 행정소송에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7. 법규명령에 대한 행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급 행정청은 하급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법규명령을 일반적 감독권에 근거해서 직접 개정 또는 폐지시킬 수 있다.
- ②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법규명령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규명령은 법규명령의 문헌·법령 상호간의 모순, 상위법령에의 위반여부에 대해 법제처의 심사를 받는다.
- ④ 법규명령의 제정·개정·폐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규명령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당해 법규명령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한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8. 공물의 법률적 특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유공물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② 공물은 그 소유권의 주체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③ 공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 ④ 공물의 범위결정 및 경계확정행위는 행정행위로서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쟁송에 의한다.
- ⑤ 공물의 상린관계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상린관계가 유추적용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還買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환매를 하기 위하여는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수용된 토지를 환매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소유권에 한정된다.
- ③ 대법원 판례는 환매권의 성질을 사권(私權)으로 본다.
- ④ 환매권의 성립에 상대방인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대법원 판례는 환매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개별법령상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10.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변경이나 통·폐합 등은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허용되게 된다.
- ② 시·군·자치구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 ③ 구역변경의 절차적 사항으로서 청취한 지방의회의 의견내용이 국가의 권한행사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일반적 입장이다.
- ④ 구역변경 등에 대해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는 배제된다.
- ⑤ 구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익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11. 통치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은 것은?

- ① 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물론 남북정상회담의 과정에서 관련부서에 대한 신고 또는 승인 등의 법적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으로 송금한 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 ② 헌법재판소는 사면은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써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고 하였다.
- ③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아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 ④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의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은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며, 이로 인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이루어졌다 해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⑤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및 그 확대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계엄선포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 ① 대법원 판례는 추상적 질의에 대한 일반적 견해표명은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 보고 있지 않다.
- ② 신뢰보호가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관계인이 신뢰를 얻기까지의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 ③ 신뢰를 원인으로 하는 처리행위는 행정청의 선행행위에 따른 적극적 행위에 한한다.
- ④ 대법원 판례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 ⑤ 공적 견해의 표명 후에 그 전제로 된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는 제한을 받게 된다.

① 지방자치제도 ②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③ 행정절차제도 ④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⑤ 행정심판제도

- ①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구속력·공정력·집행력 등과 같은 행정우월적 효력을 가진다.
- ② 공법적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부관을 붙일 수 있음이 원칙이다.
- ③ 적법한 출생·사망의 신고와 같이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의 경우 접수와 무관하게 신고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할 의무가 있다.
- ⑤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며, 특히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15.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로상의 교통표지판과 같이 직접 물건의 특성을 규율하는 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 ② 특정장소에의 통행금지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규율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 ③ 장래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약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 ④ 상급자가 특정 공무원에 대하여 발하는 직무명령은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기계적으로 부과되는 납세고지서와 같은 자동화된 행정결정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16. A세관장은 물품의 수·출입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행정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통관 및 관세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④ 세관장은 개인정보파일 관리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정보주체인 수입업자가 동의한다면, 세관장은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7. 공무원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성실의무 위반은 법령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② 착오로 결격자를 임용한 경우, 그 임용행위는 단순 위법에 그친다.
- ③ 직위해제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나중에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없다.
- ④ 대법원 판례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에서 임용후의 행위만이 징계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규칙에 의거한 불문경고조치를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본다.

18.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필요를 이유로 하는 재산권의 수용 등은 행정기관 이외에 사인을 위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 ②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자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 ③ 현행 법령상 손실보상의 방법은 금전보상과 채권보상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한정된다.
- ④ 손실보상은 사인에게 발생한 재산권행사의 제약정도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 ⑤ 토지수용재결의 내용 중 손실보상액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만의 증액 또는 감액을 행정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다.

19. A 행정법규가 2008년 3월 1일 B 행정법규로 개정되어 2008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008년 3월 31일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A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2008년 2월 10일에 개시되어 2008년 4월 10일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B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2008년 3월 10일에 개시되어 2008년 4월 10일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B법규가 A법규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도 B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2008년 3월 31일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도 B법규가 A법규보다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B법규를 적용할 수 있다.
- ⑤ 2008년 4월 10일에 개시된 사실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A법규를 적용할 수 있다.

20. 관세청장은 관세청 훈령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심사 대상선별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법률상 근거와 관계없이 법규명령이 된다.
- ② 세칙은 행정기관과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 대하여 행정법학상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 ③ 세칙은 법원이 재판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행정법학상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 ④ 관세청장이 세칙에 규정된 심사대상 선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A를 환급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면, 법원은 관세청장의 이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⑤ 세칙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두 법령상의 규정이 모순·충돌될 경우에는 세칙이 적용된다.

21.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혼합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행정청의 승인이 있어야 그 효과가 이전될 수 있다.
- ② 가행정행위는 잠정적 성질을 갖는 것 외에는 통상의 행정행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권리구제절차도 통상의 행정행위에 따른다.
- ③ 요허가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경우에도 당해 무허가행위의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적 행위로서 공법행위에 한한다.
- ⑤ 공증은 증명된 바에 대한 반증이 있을 때까지 일응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가진다.

22. 특허보세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의 특허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법학상 형성적 행위로 분류된다.
- ② 특허법에 의한 특허와 그 법적 성질이 같다.
- ③ 확인행위의 일종이다.
- ④ 세관장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주는 행위이므로 행정소송으로 이를 취소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
- 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의 하나이다.

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태료의 부과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③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이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④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도 이에 불복하기 위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⑤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경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24.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법원 판례는 환지계획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②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계획확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③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된 형량명령의 법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성문화되었다.
- ④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도시계획변경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따라 계획보장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25. 보세공장의 운영자 B는 A세관장이 과도한 검사·단속·관세부과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B의 공장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B의 고충민원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결과 A세관장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A세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A세관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A세관장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처리결과를 일반에 공표할 수 있다.

26. 행정상 손실보상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법원 판례는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를 공권으로 보고 있으나 권리구제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 ② 순수 국고목적의 작용이라 하더라도 공공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이다.
- ③ 자연적·문화적·학술적 가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 ④ 수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국회제정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⑤ 대법원은 수용유사적 침해이론을 근거로 하여 보상을 인정한 바 있다.

27. 행정행위의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접 법규범에 의하여 발생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 ② 조세부과를 위한 소득금액의 결정
- ③ 사직서의 수리
- ④ 납세의 독촉
- ⑤ 행정심판의 재결

28.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무원을 임용한 후 무효사유가 사후에 발견되더라도 그때까지 한 직무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행위로 본다.
- ② 학설 및 판례상 직무행위는 공무원의 사경제작용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 ③ 국가가 위헌·위법인 법령을 집행함으로써 개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바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④ 학설 및 판례상 입법행위는 직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실정법상의 작위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29.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판력은 당해 소송의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②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된 사실인정, 선결적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 ③ 대법원 판례는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④ 행정청의 동일내용 처분금지의무는 통상적으로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기각판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⑤ 거부처분이 실체법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당사자의 새로운 신청없이도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0. 최근 판례에 의할 때, 법률관계와 이를 다투는 소송형식이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국유 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 민사소송
- ② 국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 항고소송
- ③ 국가배상의 청구 - 항고소송
- ④ 지적공부상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 항고소송
- ⑤ 근로계약에 의해 위촉된 시립합창단원의 재위촉 거부 - 당사자소송

31.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②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아닌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의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③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④ 대법원 판례는 의무이행소송이나 적극적 형성판결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⑤ 재량행위의 경우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32. 행정소송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협의의 소익이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소송은 기각된다.
- ②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처분권한을 가진 A행정청이 자신의 권한을 하급행정청인 B행정청에 내부위임하였고, B행정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B행정청이 피고로 된다.
- ③ 제소기간의 기산과 관련하여 법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는 날’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④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 ⑤ 취소소송에 있어 집행정지신청은 민사소송상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본안소송과 별도로 독립하여 신청할 수 있다.

33. 대법원 판례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사례는?

- ①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 ②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 ③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 ④ 대집행의 게고처분과 대집행비용징수처분
- ⑤ 변상판정과 변상명령

3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법원 판례는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 ②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사정판결이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 ③ 무효인 행정행위나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모두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에서 선결문제로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나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⑤ 선행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 흠은 후행 행정행위에 승계된다.

35.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환 전의 행위와 전환 후의 행위는 본질적인 면에서 목적과 효과가 동일하여야 한다.
- ② 전환 전의 행위와 전환 후의 행위의 절차와 형식은 동일하여야 한다.
- ③ 전환이 관계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
- ④ 전환에 의하여 형성되는 새로운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소급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 ⑤ 소송계속 중 행정행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36. 행정상 사실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법한 사실행위는 결과제거청구권에 의해 구제될 수 있다.
- ② 일반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는 법률유보의 적용을 받는다.
- ③ 사실행위에 대한 집행정지는 그것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 ④ 대법원 판례는 수도사업자가 급수공사신청자에게 한 급수공사비납부통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 처분성을 부인하고 있다.
- ⑤ 개인의 법률상 이익과 직결된 공적 경고의 경우에는 경찰상의 임무규정(직무규정)만으로 가능하고 권한규정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37.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 등에 대한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강제 수단이나 대체적 작위의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의무가 아니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 ③ 이행강제금은 처벌이 아니므로 반복적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④ 이행강제금은 강제집행의 수단이므로 과태료나 형벌과 병과할 수 있다.
- ⑤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특별한 불복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38.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의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② 의견청취절차로서 의견제출권 및 청문권은 공권이기는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 ③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분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행정처분이 실체법상으로는 적법하더라도 절차법상의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 ⑤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의무에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당연무효사유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39.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이 사안을 접수한 후 관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새로운 관할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이 접수받은 사안을 다른 행정청에 이송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당해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있는 경우, 이 상급관청이 그 관할을 결정한다.
- ⑤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당해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 법원이 그 관할을 정한다.

40. 관세청장은 A관세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청장이 법률에 규정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취소하였다면, 이 등록취소처분은 위법함이 원칙이다.
- ② 관세청장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를 포함한 청문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청문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등록취소처분은 위법함이 원칙이다.
- ③ 관세청장이 등록취소를 직접 담당한 공무원을 청문주재자로 선임하였다면, 청문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등록취소처분은 위법함이 원칙이다.
- ④ 청문주재자로 임명된 자가 청문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비공개로 청문을 진행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등록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 ⑤ 청문주재자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청문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이 청문조서에 기초한 등록취소처분은 위법함이 원칙이다.

무역영어

41. Incoterms 2000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각각 10개항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다음 중 매도인의 의무가 아닌 것은?

- ① Provision of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 ② Licences, authorizations and formalities
- ③ Taking delivery
- ④ Proof of delivery, transport document or equivalent electronic message
- ⑤ Checking-packaging-marking

42. Incoterms 2000상의 CIP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nominated by him, but the seller must in addition pay the cost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destination.
- ② This means that the buyer bears all risks and any additional costs occurring after the goods have been so delivered.
- ③ However, in CIP the seller also has to procure insurance against the Sell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shipment.
- ④ Consequently, the seller contracts for insurance and pays the insurance premium.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the CIP term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 ⑤ Should the buyer wish to have the protection of greater cover, he would either need to agree as much expressly with the seller or to make his own extra insurance arrangements.

43. 다음은 Incoterms 2000의 EXW 조건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 works"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he places the goods () at the sellers's premises or another named place () for export and () on any collecting vehicle.

- ①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 not cleared - not loaded
- ② at the disposal of the seller - cleared - not loaded
- ③ at the dispensation of the buyer - not cleared - loaded
- ④ at the dispensation of the seller - cleared - loaded
- ⑤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 not cleared - loaded

44. Incoterms 2000의 변형거래조건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Incoterms give no guidance whatsoever for the variants of Incoterms, by which the parties themselves are adding words to an Incoterms seeking further precisions.
- ② If "FOB stowed" is used, the seller's obligations are extended to not only with respect to the cost of actually loading the goods in the ship but also include the risk of fortuitous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in the process of stowage.
- ③ If "EXW loaded" is used, it is not clear that the seller's obligations are extended to not only with respect to the cost of actually loading the goods on the vehicle but also include the risk of fortuitous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in the process of loading.
- ④ When sellers and buyers refer to commercial practice in liner and charterparty trade,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and those under the contract of sale.
- ⑤ Where such expression as "FOB stowed and trimmed" is used in the charterparties, it is necessary to clarify in the contract of sale whether the added obligations only relate to costs or to both costs and risks.

45. 다음은 Incoterms 2000의 용어해설 중 "checking" and "inspection"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In the A9 and B9 clauses of Incoterms the headings "checking - packaging and marking" and "inspection of the goods" respectively have been used. Although the words "checking" and "inspection" are synonyms, it has been deemed appropriate to use () word with respect to the seller's delivery obligation under A4 and to reserve () for the particular case when a "pre-shipment inspection" is performed, since such inspection normally is only required when () want to ensure that the goods conform with contractual or official stipulations () they are shipped.

- ① the latter - the former - the buyer - after
- ② the latter - the former - the buyer or the authorities of the export or import country - after
- ③ the latter - the former - the buyer or the authorities of the export or import country - before
- ④ the former - the latter - the buyer or the authorities of the export or import country - before
- ⑤ the former - the latter - the buyer - after

46. 다음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비엔나협약 1980) 제14조이다. 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A proposal for concluding a contract addressed to one or more specific persons constitutes an offer if it is sufficiently definite and indicates the intention of the offeror to be bound in case of acceptance. A proposal is sufficiently definite if it indicates the goods and expressly or implicitly fixes or makes provision for determining the quantity and the price.
- A proposal other than one addressed to one or more specific persons is to be considered merely as an invitation to make offers, unless the contrary is clearly indicated by the person making the proposal.

- ① 청약은 1인에게 행하여야만 유효하다.
- ② 불특정다수인에게 행한 제의도 적절한 청약이 될 수 있다.
- ③ 명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을 정하는 경우에만 청약으로서 유효하다.
- ④ 승낙기일을 지정하여야만 청약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 ⑤ 승낙이 있는 경우에 이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된다.

47. 다음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비엔나협약 1980) 제18조 3항 규정이다. ()에 들어갈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However, if, by virtue of the offer or as a result of practices which the parties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or of usage, the offeree may indicate () by performing an act, such as one relating to the () of the goods or () of the price, without notice to the offeror, the acceptance is effective at the moment the act is performed, provided that the () is performed within the period of time laid down in the preceding paragraph.

- ① act - dispatch - payment - assent
- ② assent - dispatch - payment - act
- ③ assent - payment - dispatch - act
- ④ agree - send - settle - assent
- ⑤ assent - send - settle - agree

48. 다음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비엔나협약 1980) 제38조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The buyer must examine the goods, or cause them to be examined, ().
- If the contract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examination may be () the goods have arrived at their destination.

- ① not later than 21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arrival - performed before
- ② not later than 21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arrival - deferred until the date on which
- ③ within as short a period as is practicable in the circumstances - performed before
- ④ not later than 21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arrival - deferred until after
- ⑤ within as short a period as is practicable in the circumstances - deferred until after

4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비엔나협약 1980)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의 일치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The goods should possess the qualities of goods which the buyer has held out to the seller as a sample or model.
- ② The seller is not liable for any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at the time of the execution of the contract the buyer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such lack of conformity.
- ③ The buyer becomes liable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for any lack of conformity which exists at the time when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even though the lack of conformity becomes apparent only after that time.
- ④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rely on a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he does not give notice to the seller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lack of conformit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discovered it or ought to have discovered it.
- ⑤ If the seller has delivered goods before the date of delivery, the buyer does not retain any right to claim damages as provided in this Convention.

5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비엔나협약 1980)에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If the seller is not bound to deliver the goods at any other particular place, his obligation to deliver consists, if the contract of sale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in handling the goods over to the first carrier for transmission to the buyer.
- ② The seller is not liable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for any lack of conformity which exists at the time when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even though the lack of conformity becomes apparent only after that time.
- ③ The buy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f the failure by the sell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 ④ If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before the date fixed, the buyer may take delivery or refuse to take delivery.
- ⑤ If the seller delivers a quantity of goods greater than that provided for in the contract, the buyer may take delivery or refuse to take delivery of the excess quantity. If the buyer takes delivery of all or part of the excess quantity, he must pay for it at the contract rate.

51. 다음 중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비엔나협약 1980)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인에 의한 계약해제 선언이나 대체품 인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 ① When the goods have deteriorated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 ② When part of the goods have been severely damaged
- ③ When the goods have been consumed by the buyer
- ④ When part of the goods have been sold in the normal course of business
- ⑤ When part of the goods have been transformed by the buyer in the course of normal use before he discovered

52. 다음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비엔나협약 1980) 제85조이다. 이는 매도인의 어떤 의무에 관한 규정인가?

If the buyer is in delay in taking delivery of the goods or, where payment of the price and delivery of the goods are to be made concurrently, if he fails to pay the price, and the seller is either in possession of the goods or otherwise able to control their disposition, the seller must take such steps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preserve them. He is entitled to retain them until he has been reimbursed his reasonable expenses by the buyer.

- ①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 ② 매도인의 물품검사의무
- ③ 매도인의 선적통지의무
- ④ 매도인의 물품보존의무
- ⑤ 매도인의 물품재매각 의무

53. 다음은 국제물품매매계약서 조항의 일부이다. 이는 무엇에 관한 조항인가?

At every year end, the wholesale price published in the Journal shall be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price published at the end of the previous year. Should there be any increase, or decrease, prices shall be adjusted accordingly.

- ① Escalation Clause
- ② Payment Clause
- ③ Termination Clause
- ④ Hardship Clause
- ⑤ Assignment Clause

54. 다음은 국제물품매매계약서 조항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If the seller fails to deliver any or all of the products within the time period specified in the Agreement, the Buyer shall deduct from the Contract Price, as (), a sum equivalent to 2% of the price of the delayed products for each week of delay until to a maximum deduction of 10% of the price of the delayed products.

Once the maximum is reached, the Buyer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 ① Insurance Premium
- ② Liquidated Damages
- ③ Fixed Prices
- ④ Sum Total
- ⑤ Exclusive Agency Fee

55.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 제3조(Interpretations)에 관한 규정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A document may be signed by handwriting, facsimile signature, symbols or any other electronic method of authentication.
- ② Branches of a bank in different countries are considered to be separate banks.
- ③ The expression "on or about" or similar will be interpreted as a stipulation that an event is to occur during a period of seven calendar days before until seven calendar days after the specified date, both start and end dates included.
- ④ The words "before" and "after" when used to determine a period of shipment exclude the date mentioned.
- ⑤ The words "from" and "after" when used to determine a maturity date exclude the date mentioned.

56.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 제10조(Amendment)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의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n issuing bank is irrevocably bound by an amendment as of the time it issues the amendment.
- ② A confirming bank may extend its confirmation to an amendment and will be irrevocably bound as of the time it advises the amendment.
- ③ If a confirming bank chooses to advise an amendment without extending its confirmation, it must inform the issuing bank without delay and inform the beneficiary in its advice.
- ④ A provision in an amendment to the effect that the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unless rejected by the beneficiary within a certain time shall be accepted.
- ⑤ Partial acceptance of an amendment will be deemed to be notification of rejection of the amendment.

57.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Transshipment means unloading from one vessel and reloading to another vessel during the carriage from the port of loading to the port of discharge stated in the credit.
- ② Transferable credit means a credit that specifically states it is "transferable". A Transferable credit may be made available in whole or in part to another beneficiary(second beneficiary) at the request of the beneficiary(first beneficiary).
- ③ Nominated bank means the bank with which the credit is available or any bank in the case of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 ④ A clean transport document is one bearing no clause or notation expressly declaring a defective condition of the goods or their packing.
- ⑤ Transferring bank means a nominated bank that transfers the credit or, in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a bank that is specially authorized by the negotiating bank to transfer and that transfers the credit.

58.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의 양도신용장(Transferable Credit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Unless otherwise agreed at the time of transfer, all charges(such as commissions, fees, costs or expenses) incurred in respect of a transfer must be paid by the second beneficiary.
- ② If a credit is transferred to more than one second beneficiary, rejection of an amendment by one or more second beneficiary does not invalidate the acceptance by any other second beneficiary, with respect to which the transferred credit will be amended accordingly.
- ③ The first beneficiary has the right to substitute its own invoice and draft, if any, for those of a second beneficiary for an amount not in excess of that stipulated in the credit.
- ④ The transferred credit must accurately reflec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including confirmation, if any, with the exception of the amount of the credit, any unit price stated therein, the expiry date, the period for presentation, or the latest shipment date or given period for shipment.
- ⑤ The first beneficiary may, in its request for transfer, indicate that honour or negotiation is to be effected to a second beneficiary at the place to which the credit has been transferred, up to and including the expiry date of the credit.

59. 다음은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의 불일치서류, 권리포기 및 통지에 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When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or the issuing bank decides to refuse to honour or negotiate, it must give a single notice to that effect to the presenter. The notice must state : ().

- ① that the bank is refusing to honour or negotiate
- ② each discrepancy in respect of which the bank refuses to honour or negotiate
- ③ that the issuing bank is holding the documents until it receives a waiver from the applicant and agrees to accept it, or receives further instructions from the presenter prior to agreeing to accept a waiver
- ④ that the issuing bank is holding the documents pending further instructions from the applicant
- ⑤ that the bank is acting in accordance with instructions previously received from the presenter

60. 다음 문장의 영작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당행은 신용장조건에 따라 발행되고 매입한 어음은 만기일에 정히 지급될 것임을 어음발행인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약정합니다. 매입은행은 신용장 뒷면에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서하여야 합니다.

- ① We hereby assure drawers and/or bona fide holders that draft drawn and negotiated corresponding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will be duly settled when presented at maturity. The draft must be signed in the back of this credit by the negotiation bank.
- ② Our bank hereby follow with drawers and/or bona fide holders that draft drawn and negotiated according to the terms of this credit will be duly paid as soon as presented at maturity. The negotiation bank has to put their signature in the back side of this credit for the credit amount.
- ③ Our bank makes an appointment that draft drawn and negotiated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will be duly honoured on presentation at maturity to drawers and/or bona fide holders. The amount of credit in the draft must be endorsed on the other side of this credit by the negotiation bank.
- ④ We hereby engage with drawers and/or bona fide holders that this credit will be duly honoured on presentation at maturity for the draft drawn and negotiated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amount of each draft must be signed in the reverse of this credit by the negotiation bank for negotiation.
- ⑤ We hereby engage with drawers and/or bona fide holders that draft drawn and negotiated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will be duly honoured on presentation at maturity. The amount of each draft must be endorsed on the reverse of this credit by the negotiation bank.

61. 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본과 사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Documents issued in more than one original may be marked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First Original", "Second Original", etc. None of these markings will disqualify a document as an original.
- ② "Invoice", "One Invoice" or "Invoice in 1 copy", it will be understood to be a requirement for an original invoice.
- ③ "Invoice in 4 copies", it will be satisfied by the presentation of at least one original and the remaining number as copies of an invoice.
- ④ "One copy of invoice", it will be satisfied by presentation of either a copy or an original of an invoice.
- ⑤ Copies of documents must be signed.

62.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5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심의 정의’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Collection" means the handling by banks of documents, in accordance with instructions received, in order to obtain payment and/or acceptance.
- ② "Financial documents" means bills of exchange, promissory notes, cheques or other similar instruments used for obtaining the payment of money.
- ③ "Commercial documents" means invoices, transport documents, documents of title or other similar documents.
- ④ "Clean collection" means collection of financial documents not accompanied by commercial documents.
- ⑤ "Documentary collection" means collection of commercial documents accompanied by financial documents.

63. 영국환어음법(Bills of Exchange Act 188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가능환어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 bill is payable to bearer which is expressed to be so payable, or on which the only or last indorsement is an indorsement in blank.
- ② A negotiable bill may be payable either to order or to bearer.
- ③ A bill is payable to order which is expressed to be so payable, or on which is expressed to be payable to a particular person, and contains words prohibiting transfer or indicating an intention that it should not be transferable.
- ④ Where a bill, either originally or by indorsement, is expressed to be payable to the order of a specified person, and not to him or his order, it is nevertheless payable to him or his order at his option.
- ⑤ When a bill contains words prohibiting transfer, or indicating an intention that it should not be transferable, it is valid as between the parties thereto, but is not negotiable.

64.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 부칙(Schedules)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Perils of the seas" refers only to fortuitous accidents or casualties of the seas.
- ② The term "pirates" includes passengers who mutiny and rioters who attack the ship from the shore.
- ③ The term "thieves" covers clandestine theft or a theft committed by any one of the ship's company, whether crew or passengers.
- ④ The term "barratry" includes every wrongful act wilfully committed by the master or crew to the prejudice of the owner.
- ⑤ The term "average unless general" means a partial loss of subject-matter insured other than a general average loss, and does not include 'particular charges'.

65. 다음은 선하증권 통일조약(Hague Rules) 제4조 1항이다. 본 조항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Neither the carrier nor the ship shall be liable for loss or damage arising or resulting from unseaworthiness unless caused by want of due diligence on the part of the carrier to make the ship seaworthy, and to secure that the ship is properly be manned, equipped, and supplied, and to make the holds, refrigerating, and cool chambers and all other parts of the ship in which goods are carried, fit and safe for their reception, carriage and preservation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3. Whenever loss or damage has resulted from unseaworthiness the burden of proving the exercise of due diligence shall be on the carrier or other person claiming exemption under this article.

- ① 운송중개업자의 책임범위에 관한 조항
- ② 하주의 추가책임범위에 관한 조항
- ③ 운송인의 추가책임범위에 관한 조항
- ④ 하주의 면책에 관한 조항
- ⑤ 운송인의 면책에 관한 조항

66. 선하증권 통일조약(Hague Rules) 제1조(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Carrier" includes the owner or the charterer who enters into a contract of carriage with a shipper.
- ② "Goods" includes goods, wares, merchandises, live animals and articles of every kind whatsoever.
- ③ "Contract of carriage" applies only to contracts of carriage covered by a B/L or any similar document of title, in so far as such document relates to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 ④ "Ship" means any vessel used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 ⑤ "Carriage of goods" covers the period from the time when the goods are loaded on to the time they are discharged from the ship.

67. 다음은 협회적하약관(ICC) 조항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No claim for () shall be recoverable hereunder unless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reasonably abandoned either on account of its actual total loss appearing to be unavoidable or because the cost of recovering, reconditioning and forwarding the subject-matter to the destination to which it is insured would exceed its value on arrival.

- ① General Average
- ② Partial Average
- ③ Constructive Total Loss
- ④ Actual Total Loss
- ⑤ Salvage Loss

68. 다음 주어진 문장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We are now in a very awkward situation, because our customers who have been very strict about the quality would like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as soon as possible.
- ㄴ. Upon unpacking the cases, we found that the quality was much inferior to the sample for which we placed the order. Moreover, the length of each piece is short by approximately 5 meters.
- ㄷ. We hope that you will give a prompt attention to this matter and let us know what you can do for us by an e-mail.
- ㄹ. We shoul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defective goods shipped by the M/S "Arirang" on January 30, 2009.
- ㅁ. After examining the enclosed cutting samples, we sent an evidence from the Lloyd's Survey Report, so we are sure you will agree to the inferiority of the goods.

- ① ㄴ - ㄷ - ㅁ - ㄱ - ㄷ
- ② ㄴ - ㄷ - ㄱ - ㅁ - ㄷ
- ③ ㄷ - ㄱ - ㅁ - ㄷ - ㄴ
- ④ ㄷ - ㅁ - ㄴ - ㄷ - ㄱ
- ⑤ ㄷ - ㄴ - ㅁ - ㄱ - ㄷ

69. 다음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is a loss incurred on an ocean voyage that involves all of the cargo owners on board such as the case where the captain of the ship tosses overboard some of the cargoes to save the ship and the remainder of the cargo. () is a situation which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a peril and therefore of a loss. it would be a storm, which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the peril of water damage or a poorly trained crew. () is the act of throwing overboard part of the cargo of a ship in an attempt to lighten the ship. The purpose of such an action is to save the ship, the remainder of the cargo and the crew. () is a partial loss incurred on an ocean voyage; the cargo may have become wet from seawater or may have been damaged by rough seas. () is the event that brings about a loss. For example, it can be a fire, collision and a flood.

- ① General Average - Particular Average - Jettison - Barratry - Peril
- ② Peril - Average - Particular Average - Peril - Jettison
- ③ Risk - Average - Jettison - Particular Average - Peril
- ④ General Average - Hazard - Jettison - Particular Average - Peril
- ⑤ Barratry - Jettison - General Average - Particular Average - Peril

70. 다음 무역 통신문들의 문장 표현 중 무역통신문 작성의 기본원칙(5Cs)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작성된 것은?

- ① You are requested to answer immediately without fail.
- ② We are surprised to learn in your letter of June 10 that the goods we sent you were received in a damaged condition.
- ③ We have drawn on you our sight draft No. 234 for the invoice amount US\$4,000 under your L/C No. 345/1234 of The Bank of America.
- ④ Please send me two pairs of slippers for my boy at an early date.
- ⑤ Allow us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you for your letter which we have just received. In reply we wish to state that we shall be very glad to send you a copy of our booklet "Electronics" in compliance with your request.

71. 다음 영문의 해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A bill of exchange is an unconditional order in writing, addressed by one person to another, signed by the person giving it, requiring the person to whom it is addressed to pay on demand or at a fixed or determinable future time a sum certain in money to or to the order of a specified person, or to bearer.

- ① 환어음은 서면으로 된 무조건적인 지시인 동시에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송부되는 것으로 환어음을 주는 자가 서명하고 제공받는 자가 요구할 경우 혹은 특정한 사람, 혹은 소지자가 요구할 경우 확정적이거나 결정적인 미래 시기에 해당 금액을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무조건적인 주문서를 말한다.
- ② 환어음은 한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 앞으로 이를 제공하는 자가 서명하고 요구시 또는 장래의 확정된 시기 또는 결정할 수 있는 시기에 특정인 또는 그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 대하여 금전상의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서면상의 무조건부의 지시를 말한다.
- ③ 환어음은 한사람인 어음작성자가 다른 사람인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에 기재된 일정한 금액에 대하여 어음에 기재된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일에 어음상의 수취인 또는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무조건적인 지시서를 말한다.
- ④ 환어음은 미래의 결정된 시기 또는 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한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서면으로 서명되고 이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특정인 또는 그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금전적으로 지불하는 조건 없는 지시서를 말한다.
- ⑤ 환어음은 한사람이 다른 사람 앞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서명하고 요구시 또는 미래에 설정된 시간 또는 대금지급 결정시기에 서면상으로 통보하여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금전으로 정한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결제하도록 하여 수취인 또는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무조건적인 주문서를 말한다.

72.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결제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The L/C Issuing Bank presents the draft to the importer.
- ㄴ. The exporter draws on the L/C Issuing Bank "Documentary Drafts" accompanied by the Bills of Lading, the Insurance Policy, the Commercial Invoices and other necessary papers in exact conformity with the terms of L/C.
- ㄷ. Against the payment or acceptance of the bill, the importer obtains the shipping documents from the bank.
- ㄹ. The Negotiating Bank dispatches the Documentary Drafts to their Correspondent Bank(L/C Issuing Bank).
- ㅁ. Against the presentation of the Documentary Drafts to the Negotiating Bank, the exporter receives the proceeds, the net value of the bill of exchange from the Negotiating Bank.

- ① ㄴ - ㄱ - ㄷ - ㄱ - ㄷ
- ② ㄴ - ㄱ - ㄷ - ㄹ - ㄱ
- ③ ㄱ - ㄴ - ㄹ - ㄷ - ㄱ
- ④ ㄱ - ㄹ - ㄴ - ㄱ - ㄷ
- ⑤ ㄹ - ㄴ - ㄱ - ㄱ - ㄷ

73. 다음 무역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Pallet - A platform with or without sides, on which a number of packages or pieces may be loaded to facilitate handling
- ② Piggyback - The transportation of truck trailers and containers on specially equipped railroad flat-cars
- ③ NVOCC - A carrier issuing B/L for carriage of goods on vessels which he neither operates nor owns
- ④ Lift-On Lift-Off(Lo/Lo) - System of loading and unloading a ship where the cargo is driven on and off ramps
- ⑤ Tare Weight - The weight of a container and/or packing materials without the weight of the goods it contains

74. 다음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indicate(s) that laydays do not count when adverse weather conditions prevail thereby preventing loading or discharging to take place.

- ① Weather Working Days(WWD)
- ② Wharfages
- ③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SHEX)
- ④ Salvages
- ⑤ Free In and Out(FIO) Terms

75. 한국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한국수출업체가 직접 외국의 수입업체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격조건(price terms)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FCA Yongdang Container Terminal, Busan, Korea
FCA ABC Warehouse, Seoul, Korea
- ② CPT Chicago Station, U.S.A.
CPT Customs Warehouse, Chicago, U.S.A.
- ③ DAF Modane, France-Italian Frontier
DAF Hamburg Port, Germany
- ④ DDU XYZ Warehouse, Chicago, U.S.A.
DDU ABC Container Terminal, U.S.A.
- ⑤ CFR New York, U.S.A.
CFR Hamburg, Germany

76. 다음 중 문장에 대한 영작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송화인의 지시식으로 작성되고 운임선지급 및 착화통지처 발행의뢰인으로 표시된 무고장 선적해상선화증권의 전통 -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shipper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buyer
- ② 보험서류에서 담보가 선적일보다 늦지 않은 일자로부터 유효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 보험서류의 일자선적일보다 늦어서는 아니된다. - The date of the insurance document must be no later than the date of shipment unless it appears from the insurance document that the cover is effective from a date not later than the date of shipment.
- ③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항해사업에 부수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that the assurer undertakes to indemnify the insurer, in manner and to the extent thereby agreed, against marine losses, that is to say, the losses incident to marine business.
- ④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또는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또 형식에 관하여도 어떠한 다른 요건에 따라야 하지 아니한다. 매매계약은 증인을 포함하여 여하한 수단에 의하여도 입증될 수 있다. - A contract of sale need not be concluded in or evidenced by writing and is not subject to any other requirement as to form. It may be proved by any means, including witness.
- ⑤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청약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취소의 통지는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 Until a contract is concluded an offer may be revoked if the revocation reaches the offeree before he has dispatched an acceptance.

77. 다음 영문의 해석이 가장 옳은 것은?

You will be dealing with an old-established company that owes its success to the satisfaction given to scores of thousands of its customers.

- ① 귀사는 수많은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안겨 주기 위하여 현재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는 전통있는 회사와 거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② 귀사는 현재 성공을 한 전통있는 회사와 거래하게 된다면 수많은 고객들로부터 만족스러운 찬사를 듣게 될 것입니다.
- ③ 귀사는 전통있는 회사와 거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고 수많은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안겨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④ 수많은 고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안겨줌으로써 그들의 성공을 입증한 전통있는 회사에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⑤ 수많은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안겨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성공을 하게 된 전통있는 회사와 귀사는 거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78. 무역거래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The exporter inquires of the credit standing of the importer and the importer's mode of doing business through the importer's bank reference or business reference.
- ㄴ. An exporter looks for business connections abroad through his commercial travellers, chambers of commerce, commercial inquiry agencies, exchange banks, business friends, business directories, web site and etc.
- ㄷ. The importer lodges claims against damages or losses, if any, with the insurance company accompanied by a Survey Report, Insurance Policy and other papers required. The claims will be indemnified against these papers.
- ㄹ. The importer tenders an 'Import Declaration(I/D)' together with an 'Import Licence' and Invoices, Certificate of Origin, if required, to the Customs Authorities.
- ㅁ. The exporter applies for the cargo space to a shipping company.

- ① ㄴ - ㄱ - ㅁ - ㄹ - ㄷ
- ② ㅁ - ㄷ - ㄹ - ㄱ - ㄴ
- ③ ㄱ - ㄴ - ㅁ - ㄷ - ㄹ
- ④ ㄱ - ㄴ - ㄷ - ㄹ - ㅁ
- ⑤ ㄴ - ㄱ - ㄹ - ㄷ - ㅁ

79. 무역통신문에 대한 해석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Your letter conveys us that you are specially interested in selling Cotton goods, and in these we may say that we are specialists. - 귀사의 서신에 서는 귀사가 면제품에 특별히 관심이 높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종에서 당사는 전문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 ② Despite the fact that dullness rules the market here at present, we are able to do a fairly good business with you if you are in competitive position. - 현재 당지 시장은 호황이며, 귀사가 경쟁력이 없더라도, 당사는 귀사와 시험적 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 ③ But before we accept your proposal it is usual with us to take up the reference named. We shall, therefore, have the pleasure of communicating with you further as soon as we hear from the Bankers suggested. - 그러나 당사는 귀사의 제의를 승낙하기 전에, 보통 지정된 조회처에 조회하는 것이 당사의 관례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제시된 은행으로부터 정보를 듣자마자, 귀사에게 추가로 연락드릴 것입니다.
- ④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letter of September 8, in which you expressed your willingness to open an account with us. - 거래의사를 표명하신 귀사의 9월 8일자 서신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⑤ As requested, we are enclosing our most recent catalog together with price list of all our electrical products for export in which we trust you will find several items of interest. - 요청하신대로 수출용 전기제품 일체에 대한 최근의 카탈로그와 가격표를 동봉합니다. 귀사가 흥미를 가질 품목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80.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조항으로 옳은 것은?

The seller surrenders the right to dispose of the goods by instruction to the carrier to deliver the goods to somebody else or at another place than stipulated in the waybill.

- ① No-disposal clause
- ② Non-waiver clause
- ③ Abandonment clause
- ④ Indemnification clause
- ⑤ Delivery Order clause